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약관-0058호(2017.3.23)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5조에 의하여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이 계약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계약에서 “은행”이라 합니다)(가) 이 제도의 운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 “가입자”라 함은 법 제25조제2항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운용관리업무)

- 이 계약에 의해 은행이 수행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운용관리업무”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 가입자가 선택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
- 은행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의 세부내용은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 정합니다.

제4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7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 (서류의 제출)

가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동의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 (가입자 및 은행의 의무)

- 은행은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은행은 이 계약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운용관리업무의 일부(이 계약에서 “재위탁업무”라 합니다)를 재위탁기관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및 제19조의 가입자교육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에는 재위탁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는 은행이 제3조의 운용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7조 (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은행은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운 것
 -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운 것
 - 적립금 운용결과와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 예·적금, 최저보종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기타 정부보증채권
 - 지방채증권
 - 투자적격 특수채(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은 제외합니다) 및 사채권
 - 투자적격 해외채권
 - 투자적격 기업어음증권

-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 상장주식 및 국내 상장 증권예탁증권(주식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것)
 - 해외 상장주식
 - 집합투자증권 등(실적배당형 보험을 포함)
 - 파생결합증권
 -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입자와 은행이 협의한 운용방법
- 은행은 제2항에서 제시한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상품 중 계약체결일부터 매 반기 1회 이상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한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3가지 이상의 운용상품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 가입자는 은행이 제시한 운용상품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운용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은행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다른 운용방법(제2항 각호에서 정한 운용방법에 한합니다)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이 제공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이익의 예상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사항
 - 운용방법에 관한 과거 3년간(과거운용기간이 3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이익 또는 손실 관련 실적
 - 운용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및 그 부담 방법에 대한 정보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정보
 - 기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제공은 대면, 서면 또는 은행과 가입자의 협의에 의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8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

- 가입자는 제7조에 의한 운용방법 중에서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이 계약에서 “운용지시”라 합니다)을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은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또는 서면을 통하여 신청
 - 은행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신청
 - 기타 은행과 가입자가 협의한 방법
-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은행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초 가입시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기한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운용지시를 하도록 통지합니다.
- 은행은 가입자에게 운용중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제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운용방법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으로 이하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이라고 합니다.)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가입자가 운용지시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은행은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만기예정일(만기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의 2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대체되거나 자동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운용방법(중도해지수수료가 없고 수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금리가 낮은 운용방법)으로 운용지시 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중 금리연동형
 - 신약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
- 제3항에 따라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급여를 신청한 이후에 납입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기 전까지 은행이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가 법령에서 정한 적립금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여 운용지시하는 경우, 은행은 규정에 따라 해당 운용지시를 거절하고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위반 사실 및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9조 (적립금 운용지시의 전달)

은행은 가입자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운용지시기일”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제10조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 은행은 매년 1회이상 가입자의 적립금 및 운용수익률 등 적립금 운용현황을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은행은 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우편 발송
 - 서면 교부
 -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 그 밖에 가입자와 은행이 합의한 방법
- 은행은 제1항 이외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령에 정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1조 (부담금의 납입 등)

-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부담금 등의 안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은행은 법 제2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출된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게 통지하고, 사용자는 가입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기관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약관-0058호(2017.3.23)

1. 사용자 부담금

가입자의 급여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

2. 가입자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퇴직신탁, 퇴직보험 또는 이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으로부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되어 납입되는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제2항의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입할 때에는 가입자별 사용자 부담금 및 가입자 부담금 내역(이 계약에서 "부담금 내역"이라 합니다)을 작성한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은행은 사용자가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한 부담금이 은행에 제출한 부담금 내역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자의 동의 및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초과분의 부담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제2항제1호의 사용자 부담금을 별도로 정한 납입기일(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납입기일의 익일부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부담금 납입시기까지 자산관리기관으로 부담금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은행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운용관리수수료)

은행은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3조 (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 사번, 임금, 자격취득 및 상실의 시기 등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 계약에서 "가입자정보"라 합니다)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가입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그 내용을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은행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은행은 재취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통지받은 가입자정보를 재취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은행 및 재취탁기관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통지 받은 가입자정보의 오류 또는 통지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은행 및 재취탁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처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가입자정보의 취급 및 제공)

- 은행은 이 계약의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가입자정보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은행은 자산관리기관, 계약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가입자의 급여이전대상 운용관리기관 등에 운용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조제2항에 의해 운용관리업무 일부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도 제1항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급여의 지급)

-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자는 사용자를 통하여 또는 직접 은행에 급여지급을 청구하며, 은행은 급여의 종류 및 수급조건 등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의 청구를 전달합니다.
- 제1항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금의 운용결과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서 가입자가 급여를 직접 지급받지 않고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급여이전"이라 합니다)을 신청할 경우 은행은 급여이전의 청구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은행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제16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 제공 또는 중도인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4호의 2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제공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가. 가입자 본인
 - 나. 가입자의 배우자
 -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제2항의 중도인출의 경우, 은행은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매각순서에 따라 자산매각 운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전에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 (중도해지)

- 가입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은행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계약이전)

-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합니다.
- 은행은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운용지시기일 내에 계약이전 신청을 위한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지시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산관리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제21조(면책) 제1항에 규정된 사유들로 인해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3항의 지연보상금은 운용지시기일 시점에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에 운용지시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계약이전 신청을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다하여 보상합니다.
-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지연보상금은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제19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

은행은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1회이상 연금제도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제20조 (선관주의의무)

은행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면책)

-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서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오류 또는 지연
 -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처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은행은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가입자 또는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약관-0058호(2017.3.23)

제23조 (인감신고)

- 가입자는 운용관리계약용 인감 및 자산관리기관에 신고한 자산관리계약용 인감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신고사항)

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중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5조 (계약의 변경 등)

- 은행은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고객센터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제1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은행은 운용관리계약서를 은행의 고객센터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운용관리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은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은행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은행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 은행이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27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가입자와 은행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은행이 합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사용자, 가입자 또는 은행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비밀보장)

은행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 및 가입자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30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1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가입자와 은행이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1부만을 작성할 수 있고, 은행은 가입자에게 사본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가입자의 요청 시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2016년 8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8조 제4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이 협정서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협정서에서 "은행"이라 합니다)은 2016년 8월 31일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업무의 일부위탁)

은행은 계약서 제3조 제2항에 의해 기록관리업무 및 운용지시전달업무를 다음의 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기록관리업무 위탁기관 : 해당사항 없음
- 운용지시전달업무 위탁기관 : 해당사항 없음

제2조 (수수료의 종류)

은행은 기록관리업무 이 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는 계약서 제12조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입니다.

제3조 (수수료의 징수)

제2조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사용자와 가입자 간에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운용관리수수료는 매 계약응당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일로 부터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대하여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해당하는 운용관리수수료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매 계약응당일에 적립금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을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에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계약서 제15조에 의한 급여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신청일, 계약서 제16조에 의한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신청일을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지급일, 중도인출일에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 기간은 직전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 까지로 합니다.
-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이 때 사용자 부담 적립금은 사용자에 소속된 가입자의 사용자 부담 적립금을 합산하여 해당 구간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가입자 부담 적립금은 사용자 부담 적립금과 구분하여 해당 단일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적립금자산 평가액	사용자부담금 수수료율(연)	가입자부담금 수수료율(연)
1억원 미만	0.40%	0.10%
1억원 이상	0.37%	

-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다음 각 목의 경우 해당 계약일(계약일이 2011년 10월 10일 이전인 경우 이날 이후 최초 계약응당일)을 기준으로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중단으로 인해 하나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한 경우,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했던 계약일
 - 합병·분사·영업양도 전후 모두 하나은행과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합병·분사·영업양도 전의 계약일

계약 경과년수	할인율
2차 년도	10%
3차 년도	12%
4차년도 이후	15%

-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100에 상당하는 적립금 자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적립금자산 매각금액에서 운용관리수수료를 초과 하는 금액은 은행이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운용관리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은행은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제1호 내지 제5호의 적립금자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약관-0058호(2017.3.23)

8.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계약으로부터 전환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초년도(신규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부담금 납입금액 중 전환된 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로 계산한 운용관리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면제기간 중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9. 은행이 운용관리수수료 미납사실을 통지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미납된 운용관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은행은 미납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미납된 운용관리수수료가 납부될 때까지 일부 운용관리서비스를 일시중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단,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지급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10.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사용자부담금으로 구성된 적립금자산평가액 평균잔액으로 하고 가입자에게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가입자부담금으로 구성된 적립금자산평가액 평균잔액으로 합니다.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 ① 계약서 제15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1. MMF
 2. 집합투자증권(채권형)
 3.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4.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5. 집합투자증권(주식형)
 6. 정기예·적금
 7.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8. 제2호 내지 제5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9.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와 자산관리기관의 자산매각 요청이 있는 경우의 적립금 자산 매각순서는 계약서 제15조 관련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의 매각순서를 준용하며, 가입자가 사전에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매각순서를 준용합니다.

제5조 (가입자 교육)

- ① 계약서 제19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
 2.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현황
 3.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등 안정적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4. 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청하여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은행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집합교육
 2. 온라인(web)교육
 3. 교부·우편·전자우편에 의한 서면교육
- ③ 은행은 매년 1회이상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 ④ 은행은 교육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일부교육을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 ⑤ 제2항제3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은행이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은행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와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의 계약 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하나은행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입자	주소 :	
성명 :		(인)
은행	주소 :	
성명 :		(인)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제31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 계약서 및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 신탁계약서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약관-0062호(2017.3.23)

제1조 (신탁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5조에 의하여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위탁자

와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계약에서 “은행”이라 합니다)이(가) 이 제도의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 신탁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 “가입자”라 함은 법 제25조제2항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이 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를 말합니다.
 -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자산관리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합계약을 말합니다.
 -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신탁금액)

- 가입자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신탁합니다.
- 가입자는 제1항의 금전 이외에 별도로 자기의 부담으로 금전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에서 가입자 본인의 부담으로 신탁하는 금액의 합은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금액 이외에 계약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 이전되는 금액을 수탁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 (신탁기간)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7조에 의한 신탁계약 해지일, 제19조에 의한 신탁계약 이전일, 제20조에 의한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 (신탁관계인)

- 이 계약의 가입자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에 한합니다.
- 이 계약의 원본 및 이익의 수익자는 가입자로 합니다.
-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자산금액 및 기타 수익자에 관련된 사항은 운용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운용관리기관의 신고)

-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은행이 정한 방법으로 은행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용관리기관이 변경·취소되었을 경우에도 은행이 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에 의한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4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의한 양도 및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제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운용지시·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 은행은 제2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운용관리기관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신탁재산의 운용)

-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릅니다.
- 가입자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통보하며, 은행은 법 제28조에 의해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합니다.
- 은행은 제2항의 통지가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이행하며 해당 통지의 이행 사실을 운용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2항에 의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없는 금전 중 지급 또는 운용을 위해 대기중인 자금(이 계약에서 “대기자금”이라 합니다)에 대해 고유계정대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합니다.

제8조 (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은 원본과 이익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제9조 (신탁재산의 보관, 예탁)

은행은 신탁재산 중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증권회사 등에 보관·예탁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신탁원본금액 및 이익계산)

이 신탁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최초 신탁금액을 신탁원본 금액으로 하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추가 수탁이 있을 경우는 그 금액을 신탁원본 금액에 가산하고 제14조에서 정한 지급, 제17조에서 정한 신탁의 종료해지, 제20조에서 정한 신탁이 종료할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원본 및 이익에서 차감합니다.

제11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기합니다.

제12조 (조세 및 제비용)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13조 (자산관리수수료)

은행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지1)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4조 (신탁금의 지급)

-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운용지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제1항에서 운용관리기관 및 은행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지연되어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은행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은행은 가입자의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용관리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가 신탁계약을 이전하거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등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급여이전을 요청한 경우 은행은 이를 이행합니다.
-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수료로 신탁재산에서 차감하여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은 퇴직소득세 등 신탁금 지급과 관련한 제세금 징수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약관에서 “지급일”이라 하며,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일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일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일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지급일 시점에 정상 지급 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7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신탁금 지급의 연기)

유가증권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신탁재산의 매각 지연 등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시장상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 지급을 위한 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은행은 가입자, 운용관리기관, 사용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금전이 확보될 때까지 신탁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법 제7조에서 정하거나 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우로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중도해지)

- 가입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은행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가입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 신탁계약서

준법감시인 심의결 제2017-약관-0062호(2017.3.23)

-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⑤ 제4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 ⑥ 이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⑦ 중도해지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지연에 관하여는 제14조 제7항을 준용합니다.

제18조 (수탁자(은행)의 사임)

- ① 은행은 수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가입자의 승낙 없이 임무를 사임할 수 없습니다.
- ② 은행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이 사임하는 경우 가입자는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을 선임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사용자가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은행은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의 사임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은행은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제19조 (계약이전)

-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지칭하는 계좌로 적립금을 지급하고 관련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은행은 제2항의 지급기일 내에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적립금에 제4항에 따라 계산된 지연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④ 제3항의 지연보상금은 "정상 처리시 지급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제20조 (신탁의 종료)

-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금 지급을 위하여 청산사무가 필요한 경우 신탁금 지급일은 청산종료일의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제21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무)

급여 등 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선관주의의무)

은행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3조 (면책)

-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4.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5.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6.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관련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은행이 수행을 거부한 경우
 7.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지연 또는 누락
 8. 제3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가 신탁한 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의 차이
 9. 제3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가 금전을 신탁한 날이 납입하기로 정한 기일 초과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4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은행은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③ 계약체결 이후 가입자 또는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인감신고)

- ① 가입자는 가입자의 인감을 은행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신고사항)

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은행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중서·거래인감 등을 분실·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인감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7조 (계약의 변경 등)

- ① 은행은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고객센터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은행은 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은행의 고객센터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은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은행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은행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은행이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29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가입자와 은행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은행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2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가입자와 은행이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1부만을 작성할 수 있고, 은행은 가입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가입자의 요청 시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 신탁계약서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약관-0062호(2017.3.23)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 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이 협정서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협정서에서 "은행"이라 합니다)은

년 월 일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 신탁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수수료의 종류)

은행은 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서 제13조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2조 (수수료의 징수)

-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사용자와 가입자 간에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관리수수료는 매 계약응당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신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매 계약응당일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 계약서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경우에는 신탁종료 사유 발생일을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 신탁종료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계약서 제14조에 의한 신탁금 지급의 경우에는 신탁금 지급신청일을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지급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신탁재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다만, 동일 사용자에 소속된 은행의 가입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은행의 사용자와 가입자들이 납입한 신탁재산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구간의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신탁재산 평가액	할인율
1억원 미만	0.30%
1억원 이상	0.28%

-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다음 각 목의 경우 해당 계약일(계약일이 2011년 10월 10일 이전인 경우 이후 최초 계약응당일)을 기준으로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중단으로 인해 하나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한 경우,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했던 계약일
 - 합병·분사·영업양도 전후 모두 하나은행과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합병·분사·영업양도 전의 계약일

계약 경과년수	할인율
2차 년도	10%
3차 년도	12%
4차년도 이후	15%

-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100에 상당하는 신탁재산에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재산 매각금액이 자산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에 대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지시에 따릅니다.
-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이 자산관리수수료에 미달할 경우 은행은 미달하는 수수료를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제1호 내지 제5호의 신탁재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운용관리기관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은행이 자산관리수수료 미납사실을 통지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미납된 자산관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은행은 미납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미납된 자산관리수수료가 납부될 때까지 일부 자산관리서비스를 일시중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단, 가입자의 급여지급, 중도인출 지급에 대한 업무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사용자부담금으로 구성된 신탁재산평가액으로 하고 가입자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가입자 부담금으로 구성된 신탁재산평가액으로 합니다.

년 월 일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 신탁계약서와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 계약 부속협정서의 계약 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하나은행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입자 (위탁자 겸 수익자)	주소 : 성명 : (인)
은행 (수탁자)	주소 : 성명 : (인)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 신탁계약서 제32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 신탁계약서 및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 신탁계약 부속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